

사설

온라인 강의 확대, 수업 질 저하는 어쩌나

올해부터 의무화되는 다전공제를 놓고 우리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학은 온라인 강의 확대라는 대안을 냈다.

강의 수요 증가와 교육 인프라 부담에 내놓은 대안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비대면 수업 방식으로 인한 수업 질 저하는 어떻게 막을지 우려스럽다.

기획조정처장과 교무처장, 총장 모두 인기 학과 쏠림으로 인한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혼합수업과 온라인 강의 확대를 대안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온라인 강의 확대는 인프라 문제의 정공법이 아니다. 물리적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충분히 고려한 대안이라 보기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학습 몰입도 저하다. 온라인 강의는 시공간 제약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동시

에 학습자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대면 수업이 주는 긴장감과 교수-학생 간의 비언어적 소통이 사라진 화면 너머의 강의는 '시청'의 영역에 머물기 쉽다. 실제로 많은 학생이 실시간 강의 도중 다른 작업을 병행하거나 녹화 강의를 배속으로 재생하며 출석 체크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수업은 화면 너머 강의는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출결 관리가 형식화될 우려를 낳는다.

상호작용 역시 크게 줄어든다. 대학 교육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아닌,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생들 간의 치열한 논쟁과 소통을 통해 완성된다. 온라인 환경에선 학생의 반응을 살피며 수업의 속도와 깊이를 조절하는 교수의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 수업이 교수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로 그칠 경우, 대학 교육이 지향해 온

비판적 사고와 학습의 가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지난 학기 화두였던 온라인 시험 공정성 논란도 빼놓을 수 없다. 줌 녹화 등을 통해 시험 과정을 녹화했지만, 부정행위를 완전히 차단하기엔 한계가 분명했다. 평가의 신뢰성이 흔들린다면 성적의 공정성은 물론 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 역시 훼손된다. 최소한 시험만큼은 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전공 의무화로 강의 수요가 늘어났다면, 학교가 해야 할 일은 그에 걸맞게 교원을 확충하고 강의실을 늘리는 실질적인 투자다. 온라인 강의를 통한 보완은 부차적인 수단이어야지, 교육 시설과 인력의 부실을 가리는 가림막이 돼선 안 된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이에 걸맞은 물적·인적 투자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다전공 의무화는 학생의 전공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제도다. 그 취지가 교육의 질 저하로 귀결돼선 안 된다. 대학 본부는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춰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온라인 강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교수-학생 간, 학생 간에 상호작용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전공 의무화는 제도 도입 자체보다 그것이 어떤 교육으로 구현되느냐가 중요하다. 강의 수요 증가를 이유로 온라인 강의 확대에만 의존한다면, 학생들에게 남는 것은 선택지의 확대가 아닌 교육 공백일 수 있다.

본부는 교육의 질을 지켜내는 데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다전공 의무화가 진정으로 학생의 선택지를 넓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선 인프라 확충과 수업 방식 개선을 병행하는 장기적 보완이 필요하다.

세시봉

경도하실 분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얼마 전 중고거래를 위해 당근마켓 앱을 켜다가 흥미로운 걸 봤다. 검은 두건을 쓴 우스꽝스러운 도둑을 프로필 사진으로 한 게시자가 '경도 할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나이, 성별 상관없이 동네 이웃을 모집하고 있었다. 모집의 목적은 다름 아닌 '경찰과 도둑'이라는 추억의 놀이를 같이 하기 위함이었다.

이 글을 보고 어린 시절 집 앞 놀이터에 모여 친구들과 함께 경찰과 도둑 놀이를 하곤 했던 것이 생각났다. 경찰과 도둑으로 나뉘어져 도둑은 경찰을 피해 도망다니고, 경찰은 그런 도둑을 잡아 감옥에 넣는 술래잡기였다. 도둑 역할을 맡아 경찰 몰래 감옥에 잡혀 있는 다른 도둑들을 풀어줄 때의 짜릿함이 어렴풋이 기억난다.

그 기억을 나만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건 아니었던 듯, 당근마켓 게시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무려 894명이나 됐다. 심지어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당근 경도 모임'은 전국적으로 유행하며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다. 검색창에 '경도'를 검색하면 수많은 모집 게시글이 나오며, 개중에는 2000명에 달하는 멤버가 모인 모집 채팅방도 있다. 사람들이 이토록 당근 경도 모임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 우리는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와 연결 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이 나를 잘 아는 누군가와 관계 유지가 어렵다. 가까운 만큼 더 조심스럽고, 어쩔 때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때로는 자발적으로 고립을 택하기도 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 당근 경도 모임은 이례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같은 경험을 공유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깊은 유대나 지속적인 친분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인간관계 유지에 피로를 느끼지 않으면서도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반영된 것이다.

어쩌면 당근 경도 모임은 사람과의 관계 유지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완전한 고립은 원하지 않는 청년 세대가 택한 하나의 선택지일지도 모른다. 깊이 않아도 괜찮고, 오래 이어지지 않아도 되는 만남. 경찰과 도둑이라는 놀이를 매개로 한 이 '느슨한 연대'는 오늘날 청년들이 관계를 대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양캠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회칙의 책임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양캠퍼스 총학생회가 올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서울캠과 달리 국제캠 비대위장은 전 총학생회장이 맡게 됐다. 서울캠의 경우 총학생회칙 제39조에 따라 중운위 전원으로 구성된 비대위 설립위원회 내 간선 투표를 통해 비대위장 선출이 이뤄진다. 국제캠의 경우에도 총학생회칙 92조 1항에 따라 해당년도 중운위에서 호선된 1인이 비대위장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대위장 선출은 양캠 모두 회칙에 따라 해당년도 중운위원 중 한 명이 선출되지만 국제캠은 다른 결과를 낳았다.

전년도 총학생회장이 올해 비대위장을 맡게 된 근본 원인은 유권해석이 필요할 만큼 회칙에 모호함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서울캠은 총학생회칙 제39조에 의거, 비상대책위원회설립위원회(비대위설립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해당년도 중

운위원으로만 구성되기에 전년도 총학생회장단의 연임을 논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구조다.

국제캠 회칙은 총학생회가 부재하는 비상 상황을 충분히 전제하지 못하고 있어, 해석상의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 상충되는 조항과 유권해석을 야기하는 조항이 학생회칙에 남아 제도의 취지와 실제 운영 사이 괴리가 나타나게 됐다.

서울캠과 국제캠의 비대위 선출 관련 회칙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양캠이 동일하게 비대위 체제에 놓였음에도 캠퍼스별로 적용되는 회칙과 기준이 다르기에 학생 자치 운영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제캠은 비대위설립과 비대위장 선출 절차를 회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울캠과의 회칙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박 비대위장은 이번 임기 내 보궐 선거를 계기로 관련 조항 전반에 대한 정비와 개정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논란을 잠재울 회칙 정비를 기대한다.



만평 이번 비대위 체제가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이후 회칙 정비와 그 이행에 달려 있다.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신동면 | 편집장 하시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앤피